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	2021년 7월 28일(수) 총 5매	
담당 부서	자원순환과 자원순환건설 추진단	담 당 자	• 광역소각장담당 우미향 ☎440-3581 • 담당자 박성현 ☎440-3582	
	대변인실	담 당 자	• 공보지원협력관 신상학 ☎440-3318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
광역-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협약 체결
 - 5개구가 참여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신설 등 기본 협약 -
 - 자원순환센터의 최적 입지를 선정을 위한 주민 참여방식 구축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와 산하 군·구가 지역 내 자원순환센터(소각시설) 설치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자원순환센터 설치가 본격화될 경우 자체매립지로 조성될 예정인 영흥 에코랜드와 함께 친환경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한편,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.

박남춘 인천시장은 28일 시청에서 남부권 등 5개구(중구 홍인성·동구 허인환·미추홀구 김정식·연수구 고남석·남동구 이강호 -이하 행정구역순)청장과 자원순환 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‘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-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’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의 골자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5개구와 함께 20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‘친환경 자원순환센터’를 건립하

는데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. 이를 위해 인천시 및 5개구가 신규시설을 건립할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게 핵심이다. 현재 송도 자원순환센터(송도 SRF포함)는 남부권의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옹진군 등 4개 군·구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.

그러나 2025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고, 중구와 동구의 발생량까지 포함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날 협약 내용에 따르면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신설 또는 대보수 시 친환경 신기술 우선 도입과 자원순환센터 용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.

소각시설 증설에 앞서 폐기물 감량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, 자원순환센터 건립 절차 진행 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 수용성도 확보하기로 했다. 시는 또 5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에 기초한 입지 선정과 안전한 시설건립,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체계적인 주민 참여방식으로 구축할 것을 협약했다.

특히 자원순환센터 신설 시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한 법률적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.

이와 관련, 인천시 관계자는 “자원순환센터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, 시 또는 구의원, 전문가, 공무원 등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구성할 것”이라며 “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앞서 시는 지난 2월 서구와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성·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최 첨단화된 친환경 서구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해 ‘「인천광역시-서구」 자원순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협약」을 체결한 바 있다.

박남춘 인천시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구와 함께 신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며 “인천시민·정치권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자원순환시설을 만들어, 인천시가 친환경자원순환을 선도하고, 더 나아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공동협약서

※ 관련 사진은 9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·인천시 인터넷방송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,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(only.webhard.co.kr)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.

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-기초 지방정부 간 공 동 협 약

- 인천광역시(이하 “인천시”)와 기초 지방정부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·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끝내고,
 - 발생단계에서부터의 폐기물 원천감량과 실질 재활용 확대, 지속가능한 친환경·고부가가치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 패러다임 대전환을 견인하며,
 -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남겨주기 위해 발생지 처리원칙을 기본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“환경특별시 인천” 만들기에 뜻을 함께 하는 의미에서,
 - 2026년 이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의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의 대보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- I.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신설 또는 대보수 시 친환경 신기술을 우선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하며, 자원순환센터 용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 - II. 자원순환센터 신설 입지의 경우, 인천시에서 기 실시한 자체조사(용역) 결과와 기초 지방정부들의 별도 협의에 따른 제안을 함께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(용역)를 실시한 후, 추후 결정한다.
 - III.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신설 시, 법령에 기초한 입지선정(입지선정위원회)과 안전한 시설 설치(환경영향평가),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(주민협의체, 편익시설)이 되도록 체계적인 주민참여형 방식을 구축하며,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
- IV. 기초 지방정부들은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연도별 광역폐기물처리 시설(수도권매립지, 송도·청라 자원순환센터)의 반입 및 감량 목표를 준수한다.
- V. 인천시와 기초 지방정부들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“환경특별시 인천”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, 지역정치권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한다.

2021년 7월 28일

